

중대재해법 이어 집단소송제·징벌적손배 등 ‘국회대기’

“기업주가 도둑놈이나, 사업 접을지 고민” 中企 ‘부글부글’

코로나에 1년 가까이 경영 악화 연이은 규제입법 예고... 사면초가 “정치권, 처벌하고 잡아넣을 생각만”

“대표이사나 현장대리인이 ‘안전’에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며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부주의로 사고가 나는 것까지 어떻게 일일이 챙기겠느냐. 현장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따라다닐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면 대표이사까지 처벌하도록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특히 중소기업의 비용을 늘리고, 사업 의지를 꺾어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빌딩, 아파트, 호텔, 공장 등의 냉난방, 공조, 위생 설비를 담당하는 기업들이 모여 있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정달홍 회장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통과된 직후 전한 말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년 가까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연초부터 각종 규제 입법이 국회 문턱을 넘거나 줄줄이 기다리면서 ‘사면초가’ 상태다.

10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을 비롯해 1·4분기 중 통과 윤곽이 잡힐 집단소송제, 징벌적손배해상제 등이 향후 기



경제단체들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 5번째부터)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대표적인 것들이다. 50인 이상 기업의 주52시간제 확대도 마찬가지다.

이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들은 올해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약 7%의 기업은 코로나19 이후 ‘사업정리’를 고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서다.

경영계(사측)나 노동계(노측)에서 모두 환영받지 못한 채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상·질병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기관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부상·질병의 경우 ‘10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으며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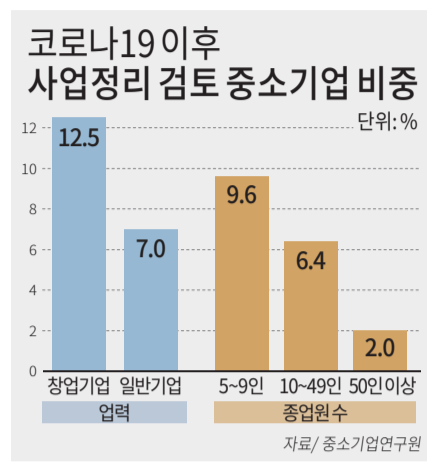
이번에 국회를 통과해 1년 후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특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오너와 최고경영자(CEO)가 같은 절대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우려를 표했었다.

중소기업계 대표 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는 다른 경제단체와 함께 법 통과 직전까지 여·야 등 정치권을 찾아 호소

하고, 수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 형성에 나섰다. 국회 통과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향후 중대재해법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50인 이상 중소기업에 대한 최소 2년 이상의 유예 기간 부여 ▲추가 보완 조치 없을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대응 수위를 점차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에 화가 난 중소기업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자신을 ‘60살 넘은 기업가이며 싸인물 제작 분야에서 30년 넘게 활동해 오고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이제는 용기와 힘이 부친다”면서 “정치권)에선 기업주를 마치 도둑놈으로 생



각하고 처벌하고 잡아넣을 생각만하는 등 중대재해법이 통과되고 기업주가 책임을 지고 실형을 살아야한다면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업을) 그만두고 손을 놓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빠르면 오는 3월께 국회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집단소송제·징벌적손배해상제 등 추가 규제입법도 추가적으로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라는 업계의 지적이다.

관련 내용이 담긴 상법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의 심사를 거치고 있는 중으로, 심사가 끝나면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2월께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여당과 정부는 이를 4월 보궐선거 직전인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부, CES에 K-스타트업 전용관 오픈

97개사 개별 온라인 부스 오픈 기업영상 등 디지털콘텐츠 소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인해 온라인으로 전면 개최되는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한국 스타트업 97곳이 참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CES 2021’에 K-스타트업(KSTARTU) 전용관을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연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CES는 스타트업을 11개 주요 분야의 하나로 구성했다.

▲5G&사물인터넷 ▲광고&엔터테

인먼트&콘텐츠 ▲자동차 ▲블록체인 ▲건강&웰니스 ▲가정&가족 ▲몰입형 엔터테인먼트 ▲제품디자인&제조 ▲로봇&인공지능 ▲스포츠 ▲스타트업에 포함되면서다.

특히 ‘K-스타트업’이라는 국가 브랜드 아래 모인 창업기업 97개사는 온라인상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국내 창업기업의 기술과 역량을 전세계 참관객에게 알리고, 보다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온라인 K-스타트업관에 참여하는 국내 창업기업 97개사는 창업진흥

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구테크노파크 등 10개 지원기관을 통해 각각 선발됐다.

참여 스타트업 중 루플(Luple), 엠투에스(M2S), 소프트피브이(SOFTPV)는 ‘CES 혁신상(Innovation Awards)’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97개 스타트업들의 분야는 건강·웰니스(24개사), 5세대(5G)·사물인터넷(24개사), 로봇·인공지능(15개사) 등으로 CES 2021 온라인 전시 사이트 내에 개별 온라인 부스를 열어 기업 소개와 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를 선보인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경남서부지부 관계자가 지난 8일 한 중소기업과 화상으로 정책자금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중진공

중진공, 비대면 정책자금 지원 본격화

상담·자금평가 비대면 방식 도입

중소기업 정책자금 집행에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의 확산 예방과 안전하고 신속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비대면 방식 정책자금 지원에 본격 나서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정책자금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비대면으로 상담을 하고, 자금평가도 비대면 방식을 도입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운영하고 있다.

일환으로 경남 진주중진공경남서부지부는 지난 8일 오전 동백오일 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거제동백연구소와 화상 방식으로 정책자금 평가를 진행했다.

이날 평가는 중진공과 평가기업 회의실에서 화상 시스템을 활용해 진행했

다. 중진공은 기업이 온라인으로 제출한 기업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에 참여한 임원숙 농업회사법인(주) 거제동백연구소 대표는 화상으로 자사 제품의 시장성과 기술력을 설명했다.

임 대표는 “처음엔 담당자와 대면하지 않고 정확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을까 우려했지만 중진공 평가직원이 사전에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바탕으로 제품 이해도가 높았고, 대면평가와 다름없이 충실하게 평가가 진행된 것 같아 만족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중진공 정진우 기업지원본부장은 “코로나19의 확산 위험 등 현장 평가를 위한 직원의 업무 부담은 낮추고, 화상평가 진행으로 절약한 이동시간을 평가에 추가로 활용할 수 있어 기업 만족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에 발맞춰 비대면 방식 평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김승호 기자

노란우산, 공제부금 금리 ↑ 대출이율 ↓



중기중앙회 소상공인 지원 강화 납입부금 이율 2.1%→2.2%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인 노란우산의 공제부금 금리는 올라가고, 대출 이자는 내려간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노란우산의 기준이율을 상향조정하고, 대출이율은 인하했다고 10일 밝

혔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따라 중소기업부가 관리감독하고,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사업주의 퇴직금이나 목돈 마련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를 말한다.

기준이율은 폐업·사망 등 공제금 지급시 납입부금에 대한 이자 적립의 기준이 되는 이율로 올해 1월부터는 기존 2.1%에서 2.2%로 0.1%p 오른다. 반면 대출이율은 기존 2.9%에서 2.8%로 0.1%p 내렸다.

중기중앙회는 분기별로 결정되는 기준이율 상향으로 올해 1·4분기에만 약 140만명의 가입자에게 38억원의 이자가 추가 적립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대출이율 하향으로 약 16만명의 노란우산 대출자에게 8억원 가량의 이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